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마련 위한 TF 본격 가동

- 1월 21일 킥오프 회의 개최, '26년 7월 종합대책 발표 목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1월 21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복청 차장을 팀장, 행복청 관계 부서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를 팀원으로 구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교통 분야 전문기관과 공주·카이스트 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 당선작 설명을 시작으로, TF 운영계획과 함께 교통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TF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교통관리 등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CTX 역사 연계 방안, BRT 및 순환 셔틀 도입, 내부도로 체계 개선, 광역·내부교통 기능 분리, 주차 수요관리 방안 등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 분석을 통해 대책 시행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교통 대책 TF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연구와 함께 교통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2026년 7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TF 출범과 킥오프 회의는 지난번 발표한 ‘국가상징 구역 교통 대책을 2026년 7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회의사진

담당 부서	도시계획국 교통계획과	책임자	과 장	강병구 (044-200-3280)
		담당자	사무관	문병협 (044-200-3284)





<행복청은 1.21(수)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